임종석·송영길·박광온 핵심 역할…박영선 10차례 호남 유세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공정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달라는 촛불 민심의 염원이 주요 동력이었지만, 선대위를 중심으로 당 내외 인사들의 체계적이고 헌신적인 선거 지원 활동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당과 선대위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지 못하면서 효율성이 크게 떨어졌던 것과는 비교해 이번 대선에서는 선대위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며 제1당의 조직과 경험을 십분 살려냈다는 것이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사람으로는 '호남 특보'를 자처하며 무려 6개월 이상 호남에 상주하다시피하며 민심의 저변에 깔린 비문(비 문재인) 정서를 완화시킨 부인 김정숙 여사가 꼽힌다.

여기에 경선 과정에서의 치열한 난타전에도 불구, 깨끗이 경선 결과에 승복하고 문재인 후보의 측면 지원에 나선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도 문재인 대통령을 만드는데 한 몫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정숙 여사 '호남 특보' 자처 … 신경민 TV토론 성공 견인

안희정·이재명 측면 지원 … 호남 인사들 지지층 결집 주력

선대위 상임선대본부장을 맡은 추미애 대표도 전면에 나서기 보다는 뒤로 한 발 물러나 전국 순회 선거 지원에 나섰으며 때로는 경쟁 후보에 대한 날 선 비판을 쏟아내는 악역도 마다하지 않는 등 당의 중심에서 역할을 했다.

송영길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호남을 중심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민주당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박영선 의원도 막판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 호남을 10여 차례 이상 방문하며 문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등 맹활약했다.

문재인 후보의 특별한 신임을 받은 임종석 비서실장은 선대위 내의 이견 등을 적절히 조정하며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 '역시 임종석'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전해철·양정철·이호철 등 친문 핵심 3인방도 선대위 안팎에서 보이지 않게 묵묵히 자신들의 역할을 소화했다. 조직본부장을 맡은 노영민 전 의원과 조직부본부장인 황 희 의원, 한병도 전 의원도 민주당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지층 결집에 충분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책 분야에서는 조윤제 국민성장위 상임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좌표를 제시했으며, 김광두 새로운 대한민국위원장과 이용섭 비상경제대책단장도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

박광온 의원은 공보단장을 맡아 선거전의 최전방에서 백병전을 벌였으며 김경수 대변인도 문 후보와 현장을 함께하며 생동감 있는 스토리를 전달하고 경쟁 후보들의 네거티브 공세를 차단하는 전과를 세웠다.

신경민 의원은 미디어본부장을 맡아 문 후보의 성공적인 TV 토론을 이끌었으며 미디어본부 부본부장을 맡은 기동민·박용진 의원과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도 메시지 분야에서 상당한 활약을 했다.

문재인 후보 선대위에선 광주·전남지역 인사들이 핵심에서 활동했다. 송영길 총괄본부장, 임종석 비서실장, 박광온 공보단장 등을 필두로 전윤철 전 감사원장과 김효석 전 의원,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그동안 쌓아온 경륜을 바탕으로 정책과 전략 분야에서 측면 지원에 나섰다.

여기에 임채정 전 국회의장, 김상현 전 의원, 정동채 전 장관 등도 문 후보의 뒤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언론 고문을 맡은 정순균 전 국정홍보처장은 호남에 상주하며 문 후보 지지층 결집을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펼쳤다.

이형석 광주시당위원장과 이개호 전담도당위원장도 문재인 후보의 압도적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역 곳곳을 다지며 굵은 땀을 쏟았다.

강기정 선대위 총괄수석부본부장과 신정훈 농어민위원회 상임위원장도 중앙 선대위와 지역 선대위와의 공조 아래 문재인 후보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였다. 송갑석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은 선대위 정책본부와의 협의, 광주군공항 이전 부지에 5조원 규모의 스마트 시티 조성 공약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서갑원 특보단장과 김영록 조직공동본부장 등도 전남지역을 발로 다지며 비문 정서 완화에 총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다. 박혜자 중앙선대위 대변인도 선거운동기간 광주에서 문 후보의 '입' 역할을 했으며, 이기표 언론특보는 경선 과정에서부터 지역 언론과의 소통을 넓혔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 선대위 인사들은 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자 입각 및 청와대 입성 등을 내세우며 '완장'을 차려는 행태를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일보 페이스북 100명 투표 인증샷

광주일보가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광주일보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진행한 투표 인증샷 이벤트에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이 이어졌다. 손등에 기표도장을 찍거나 가족과 함께하는 모습 등 다채로운 표정이 담겼다. 이벤트 참여자 100명의 투표인증 사진을 선정해 이미지로 재구성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국민의당·정의당과 협력 … 바른정당과도 연대 주목

국민통합정부 그림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를 열었지만 당장 여소야대 상황이어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통합정부를 어떻게 구현해 낼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내세우면서 선대위 내에 통합정부추진위원회를 꾸리고 당선 후를 대비했다.

선대위 통합정부추진위원회는 지난 4일 "정파와 지역, 세대, 계층을 뛰어넘어 국민의 역량을 결집하는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국민통합정부'를 강조한 '성공적인 통합정부를 위한 제안서'를 내놓았다. 추진위는 또 "다른 당의 당적을 보유한 사람도 참여하는 합리적 진보, 개혁적 보수의 대한민국 드림팀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탕평의 원칙'도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할 때 문재인 정부는 일단 국민의당과 정의당 인사를 포함하는 '통합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민의당(40석)·정의당(6석)과 협력하면 과반수를 넘겨 국정운영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또 개혁 보수를 직접 거론했다는 측면에서 바른정당 인사들도 통합정부에 배치할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노동 관련 부처에 정의당 인사를, 안보 관련 부처에 바른정당 인사를 기용하는 통합정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통합정부안이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통합정부와 관련, 정당 간 연합이나 연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박지경기자 jkpark@

"靑·부처 요직 호남 30% 배려해야 대탕평"

호남 인사소외 해소되나

19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10일 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선후보가 제시한 호남 공약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 호남인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때 밝힌 호남 관련 공약은 지역 발전정책 외에 '호남을 중용하는 대탕평 인사'였다.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호남 인사 소외나 호남 인사 차별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 정부가 국민통합과 협치를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호남이 바라는 만큼 '호남 인사 중용'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지역민의 우려다.

특히 부산 출신인 문 대통령이 대선기간 초기부터 형성된 대세론의 영향으로 대구·경북과 경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1위를 차지했고 각계각층의 지지를 골고루 받았기 때문에 배려해야 할 세력이 많다는 점이 이 같은 우려를 키우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호남의 압도적 지지 속에 민주당 후보가 됐고 또 애초 호남 표심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호남에서 압도적 표차로 제치고 전국 최대인 60% 안팎의 지지율을 거뒀기 때문에 호남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민의 우려 내용은 문 대통령이 무늬만 호남인 인사를 총리나 장관 몇 자리에 앉히고 호남 인사를 우대했다는 자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호남 출신인 민주당 관계자는 "호남 인사를 배려한다면서 '흘러간 고복수 노래격' 인사나 이미 지난 정부에서 요직을 누릴 대로 누린 인사들이 호남 출신이라는 것만 내세워 다시 중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지역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총리와 장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청와대 비서진과 고위공무원 인사. 나아가 중견 공무원 인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보수정권 10년 동안 보기 힘들었던 청와대 비서진과 각 부처의 주요 국·과장 자리에 호남인사를 30% 이상 배치하는 것이 호남 인사 배려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